



프랑스 정권 교체와 유로존 재정위기 해법 기조 변화

이정환 선임연구원

요약

■ 유로존이 재정위기 해결을 위해 재정긴축 정책을 선택하였으나, 재정긴축으로 인한 경기침체가 더욱 심각한 위기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로 단기적으로는 성장지원이 우선이라는 주장이 높아짐. 최근 프랑스 등의 선거 결과는 재정긴축에 따른 경기침체를 감내하지 못하는 유로존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시사함. 아직은 독일이 주도하는 재정긴축 중심의 유로존 재정위기 해법 기조가 크게 수정되기는 이른 시기이지만, 기존의 재정긴축 목표에 대해 다소의 유연성을 용인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 2012년 유로존 경기침체 우려¹⁾가 심화되자 재정위기의 해법으로 추진되었던 재정긴축 정책에 대한 논란이 대두됨.

- 재정건전화를 위해 도입한 재정긴축 정책으로 오히려 경기침체가 가속화되면서 기존의 재정긴축 계획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주장이 높아짐.²⁾
- 여기에 선거에 따른 포퓰리즘이 가세하여 단기적으로는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는 논의가 강화됨.³⁾

■ 프랑스 대선⁴⁾과 그리스 총선⁵⁾에서 집권당이 패배함에 따라 재정긴축 정책의 수정 가능성이 제기됨.

- 재정긴축에 대한 재정위기국의 피로감이 누적된 가운데 유로존 주요국의 선거가 맞물리면서 재정긴축 유지에 대한 정치적 기반이 약해짐.

1) 유럽집행위원회(EC)는 유로존 경제성장률이 2012년 -0.3%, 2013년 1.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전문가들은 유로존이 1/4분기에는 가까스로 경기침체를 피했으나, 2/4분기에는 경기침체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

2) Financial Times(2012. 5. 4), A pact for growth is vital for Europe.

3) 기획재정부(2012. 5. 17), 「최근 유럽의 재정건전화 논쟁 추이와 전망」, 『글로벌 정책리뷰』, 제7호.

4) 5월 6일 프랑스 대통령 선거 결과 프랑수아 올랑드(Francois Hollande) 사회당 후보는 51.62% 지지를 얻어 니콜라 사르코지(Nicolas Sarkozy) 대통령(48.38%)을 누르고 새 대통령에 당선됨.

5) 5월 6일 그리스 총선 결과 정치권이 연립정부를 구성하지 못함.

- 독일도 지방선거에서 여권이 패배하면서 재정긴축을 주장하는 독일의 정치적인 리더십도 다소 약화됨.
- 현재까지 포르투갈, 그리스, 슬로베니아 등 3개국만 신재정협약⁶⁾을 비준함으로써 2013년 초에 협약 발효가 가능할 지도 불투명해짐.

■ 또한 프랑스 좌파 정권 등장 등으로 유로존 재정위기가 다시 불거질 것이란 우려가 대두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이 심화됨.

- 유로존 재정긴축이 후퇴할 움직임을 보이자 글로벌 투자자들은 유로화를 기피하고 안전자산인 달러 및 엔화로 이동하면서 유로화 가치는 하락함.
 - 5월 7일 현재 달러 대비 유로화는 1.2954달러로 4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심리적 지지선(1.3달러) 아래로 하락함.
- 국채시장에서는 자금이 안전자산으로 이동함.
 - 5월 7일 현재 10년 만기 일본 국채 금리는 5월 7일 0.861%까지 떨어져 2010년 10월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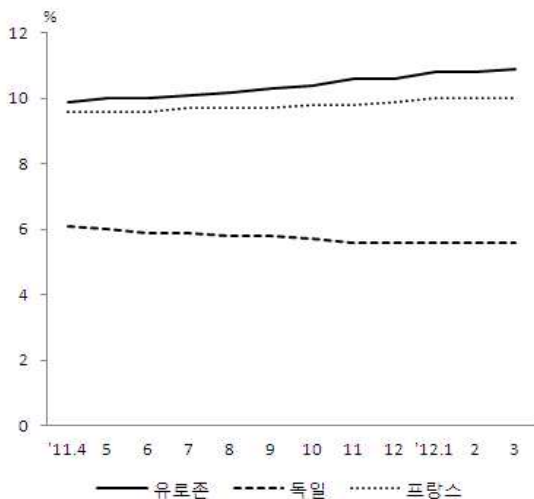
■ 프랑스 올랑드 사회당 대통령 당선자는 재정 투입을 통한 경제 성장, 부유층 및 대기업에 대한 증세, 신재정협약 재협상, 유로본드 발행, 유럽중앙은행(ECB) 역할 재정립을 주장하면서 재정긴축 위주의 재정위기 해법에 대해 반대함.

- 올랑드는 청년 일자리 15만 개 창출, 교사 6만 명 추가 채용 등 정부지출을 확대하여 고실업과 저성장 해결에 도움을 주겠다고 밝힘.
 - 프랑스의 실업률은 2012년 1/4분기 현재 13년 만에 최악인 10.0%를 기록하였고, 경제는 2011년 4/4분기 0.1% 성장 이후 제로 성장하여 답보 상태를 보임.
- 프랑스 신정부는 정부지출 확대에 투입할 재원을 부유층 증세로 마련함으로써 '노동의 유연성 강화와 감세를 통한 기업 활성화'로 요약되는 前정권의 경제정책에 근본적인 수정을 가함.
 - 연 15만 유로 이상 소득자의 최고 소득세율을 45%로 올리고, 100만 유로 이상 소득자의 최고 세율을 75%로 인상하였으며, 상속세율을 높이고 대기업의 법인세 감면 혜택을 축소함.

6) 독일 총리가 주창해 주도적으로 합의한 EU 신재정협약은 영국과 체코를 제외한 25개 회원국에서 독일식 재정긴축을 법제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함. 신재정협약은 각 회원국 누적 공공부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당해 연도 재정적자의 경우 GDP의 3%를 넘을 경우 EU 당국이 해당 국가를 자동으로 규제하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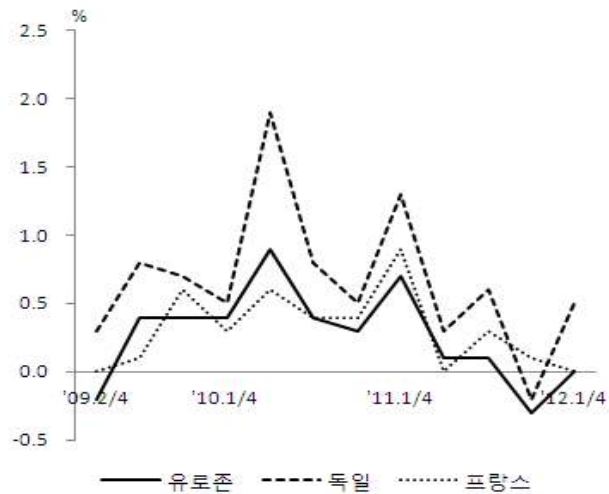
- 글로벌 금융위기의 주범을 은행과 헤지펀드의 과도한 투기로 인식하여 은행을 투자은행과 소매은행으로 분리하고, 금융소득세를 높이며 금융거래세를 도입하기로 함.
- 프랑스 신정부는 독일이 주도한 EU 신재정협약 내용이 지나치다고 반대하면서 신재정협약을 보완하기 위해 별도의 '성장전략'을 추가함.
- 또한 성장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으로 유로존 공동채권인 '유로본드' 발행을 제안함.
 - 유로본드 발행 시 재정이 상대적으로 건전한 독일의 국채발행 비용이 높아지는데 이는 독일이 재정건전성이 낮은 주변국을 지원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독일이 유로본드 도입을 반대함.
- 독일과 달리 프랑스 신정부는 ECB가 인플레이션 통제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재정정책을 지원하는 역할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함.

〈그림 1〉 프랑스 실업률



자료: Eurostat.

〈그림 2〉 프랑스 경제성장률(전분기 대비)



자료: Eurostat.

■ 프랑스 · 독일은 5월 16일 첫 번째 정상회담에서 신재정협약 재협상에 대한 이견 접근에 실패하였으나, 단기적으로는 성장지원이 우선이라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재정긴축 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독일은 성장을 위해서라도 재정긴축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프랑스는 신재정협약에 성장이라는 개념을 중요한 요소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여 양국 간 이견이 큰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재정적자가 유로존 위기의 원인이라기보다 결과라는 논의가 힘을 얻으면서 단기적으로는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⁷⁾

7) Wall Street Journal(2012. 5. 10), Germany to Euro Zone: Do as We Say, Not as We Do.

- 또한 긴축을 통해 재정적자를 줄인다고 하더라도 저성장에 따른 재정적자 확대로 긴축정책의 효과를 얻기 어렵다는 의견도 제기됨.
 - 강도 높은 재정긴축이 경기침체와 실업률 증가, 소비 둔화, 성장률 하락, 세수 감소 등으로 이어져 결국 재정건전화목표가 지연되는 결과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논리임.
- 향후 기존의 재정긴축 목표가 수정 완화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 국가별 재정 여력에 따라 차별적인 재정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재정건전성이 더욱 악화되는 등 유로존 재정위기가 심화될 가능성도 상존함. [kiri](#)